

社說

재고 필요한 집단제적사태

그동안 '한약 조제시험 무효화'를 주장하며 수업과 등록을 거부해온 한의대생 1백19명(우리학교 81명)이 지난 2일 최종등록일을 넘김으로써 제적처리 되었다. 집단제적만은 막아야 한다는 우려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 유례없는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복지부가 1년 가까이 계속된 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에 대해서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집단제적이 입학해온 지난 8월 30일에 와서야 한의대생측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한의약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약 조제시험의 무효,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 한약학과와의 한의대내 설치 또는 독립된 한약대학으로의 승격 등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이 배제됨으로써 학생들을 강요실로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제적을 막기위한 구체적으로 나온 교육부의 '학칙변경을 통한 최종등록일 연기' 또한 애초에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한의대생들을 학업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등록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한의약 발전에 관한 그들의 요구 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하려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되어야 했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한의계의 대응 방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 나갈지 쉽사리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약분쟁이 이전보다 더 악화될 양상을 띠게 되리라는 것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너무 민감한 문제이며 쌍방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적 어려움만을 강조한 채 한약분쟁을 종결시키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느 일방의 희생이 강요된 형태가 아닌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번의 집단제적사태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제적으로부터 한의대생들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한약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치이기 때문이다.

학부제, 적극적 관심 필요

학부제가 대학가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면서이다. 우리 교육의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담고 있는 '교육개혁안'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대학교육의 현실에 과감히 시장경제의 논리를 도입하여 각 대학의 특성화·전문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점을 그 요지로 삼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교육개혁안'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각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차등적용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교육개혁안에 제시된 여러 제도들을 깊은 고려없이 앞다투어 도입함으로써, 그 실제 적용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 중 핵심적인 사안은 학부제도입이라고 하겠다. 기존의 대학이라는 개념을 판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학부제를 도입과정의 신중함이 결여된 채 막무가내로 도입한 여러 타 대학들은 그 제도상의 모순이 표출되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여러 대학에 도입된 학부제의 실상은 지난 77년부터 4년간 실행되었다가 우리 교육 전반을 파행으로 몰고 간 실험대학과 별반 차별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무모함과 위험성은 적지 않다고 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의 차등화는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학교는 학부제의 도입에 있어 타 대학에 비해 신중을 기하여 많은 제도상의 보완을 거친 후 내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부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공표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없을 수 없으며 이를 예방하려는 제도상의 보완에 게을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대학교육의 수용 주체인 일반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라 할 것이다.

학부제의 본 목적이 수용자 중심 교육의 구현이라 할때, 교육수용자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부제 실시대상이 아니라는 단순한 개인주의보다는 우리학교의 미래상을 가꾸는데 스스로 참여하여 우리 교육을 올바르게 세우려는 노력과 폭넓은 공동체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고 하겠다.

팀재개, 북한고립 위한 외교적 포석

현정부의 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 주장의 의미

시론

신 석 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직부장)

몇해 전까지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는 사상 최대의 군사훈련이 이 땅에서 벌어졌었다. 매년 팀 스피리트훈련이 진행되는 봄날에는 남북 수십만의 정규군은 물론이고 수천명의 전대협 소속 대학생들이 반대시위를 하고 북쪽에서는 평양시 군중대회, 개성시 군중대회 하며 대규모 반전군중집회가 진행되었다. 실로 전민족적(?)행사라 할 수 있었다.

과거 팀훈련 북한의 적

팀 스피리트 훈련은 지난 75년 '월남공산화에 북한 정권이 '고무'되어 일으킬지도 모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다는 명분아래 76년부터 한-미 합동으로 매년 실시돼 왔었다. 이 훈련의 규모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물론 일본과 태평양에 배치돼 있는 미군의 합정, 항공기, 본토에 있는 미 지상군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육-해-공 일체훈련으로, 북한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훈련 참가인원은 1976년 5만명여로 출발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86년에는 21만명 선까지 뒀다가 이후 감소돼 90년대 들어서는 5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76년부터 93년까지 이 훈련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은 '팀 스피리트 훈련이 자신들을 겨냥한 한-미 두나라의 핵 선제타격을 기초로 한 북침공격'이라는 주장



훈련 재개 주장 현 정부 심리상태의 반영

남측 배제한 북·미협상 가속화 저지 의도

대선앞둔 미국, 설불리 수용하지 않을 듯

을 계속해왔다. 합의 파기 촉구선언의 주장

을 계속해왔다.

합의 파기 촉구선언의 주장

90년대 들어 북한이 '핵 카드'를 들고 나오며 따라 한국과 미국은 북-미간 핵 협의를 진행중이던 92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처음으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어 94년 북-미간의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진 데다 북한측이 줄기차게 훈련 중단을 협상조건으로 내세움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며 제네바 협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이 훈련의 조건부 일시중단을 합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8월24일 국방부는 무장간첩 침투사건과 관련해, 지난 94년부터 중단된 팀 스피리트 훈련의 재개를 미국에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팀훈련의 역사속에서 보아 왔듯이 팀훈련 재개주장의 의미는 단순한 북미연합 방위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게 하는 합의파기 촉구선언의 의미를 띠고 있다. 초강수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팀훈련의 재개는 제네바 합의의 당사자이며 동시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주된 당사자인 미국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과연 미국이 지금 제네바 합의를 무력화시키고 북미간의 대화진전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 확실한 팀훈련재개방향을 공식화할 수 있는가?

평화협정 체결 필수적

성급하게 결론짓자면 국방부의 팀훈련 재개주장은 현실가능성이 0.1%도 안되는 주장이며 이는 차라리 대북협박공세, 대미호소의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북정책의 가장 주요변수라 할 수 있는 평화협정 실현방안에서 4자회담과 제네바 합의의등이 북한을 파트너로 한 미국의 현실적 주도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하더라도, 남한 독자적인 정책변화가 영향을 줄 것은 거의 없게 장치되

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냉전이 해체 되고서도 냉전의 맹주 미국은 탈냉전의 독점적 관리자가 되고 싶어한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지금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형성이 필수적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비켜갈 수 없는 관문이며 평화협정을 체결한 주체가 탈냉전적 안보환경에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미국이 수년간의 부침속에 마련된 대한반도 전략의 근본적 수정을 감내하면서도 대선을 불과 한달여 앞둔 지금, 김영삼정부의 제네바합의의 파기 촉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궁색한 현정부 대외 입지

그렇다면 실현가능성도 없는 이 같은 방안들이 여러차례 제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무엇을 노리는 걸까?

지금 김영삼 정부는 고도의 정치외교전과 물리적 봉쇄로 북한정부를 고립시키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남한 정부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새로운 난

관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제고하고 있다. 계속되는 외교적 노력으로 지난 제네바합의에서는 '남북대화진전'을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데 성공한 바 있으나 현실은 미국의 일방통행식 제네바 합의의 이행과정에서 '남북대화 진전'이라는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은 현정부의 대미, 대북관계에서 이같은 궁색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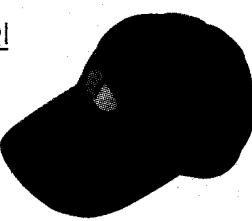
결국 현 정부는 무장간첩과통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 위협성과 적의성을 적극 공개함으로써 남한이 소와된 상태에서의 북미관계의 빠른 진전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팀 스피리트훈련 재개주장은 이러한 현 정부의 심리상태의 극적 반영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은 물론 북한에 대한 효과적 고립과 봉쇄를 통해 중장기적 흡수 병합을 시도하려는 한국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다른 배낭여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은 또다른 배낭여행 - 극동건설에서 시작하십시오. 세계속에서 건설한국의 이름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극동건설 - 끝없이 넓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더 크게 성장하십시오.



대졸 신입사원 모집

지도에 남는 役事로 역사에 남는 건설 - 극동건설에서 그 꿈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모집부문	1. 인문계 : 상경계, 법경제, 영문학 2. 자연계 : 토목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산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안전공학, 교통공학
모집인원	○○○명
응시자격	1. '97년 2월 4차에 대졸 예정자 및 졸업자 2.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무학과 소지자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해외어학에 합격하지 않은 자 4. 방학별 또는 연차제 5. 자격, 면허 및 석사학위 소지자 유예 6.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유예됨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인·적성검사와 면접 3차: 최종면접 및 신체검사
채용서류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서양행) 1부 2. 대졸예정인원 1부 3. 자격증 사본 및 TOEIC 성적표 (소지자에 한함)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1. 기간 : '96. 10. 9(수) ~ '96. 10. 18(금) 오전 09:00 ~ 오후 16:00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2. 교부 및 접수처 : 서울사무소 송파로 371 60-1 (우: 100-705) 극동건설(주) 인사부 *주요업무 : 서울사무소 송파로 371 60-1 (우: 100-705) 극동건설(주) 인사부 (우: 100-702) (마감일 내 도착한 용기우편에 한함)

*문의처: 서울 송파로 371 60-1 극동건설(주) 인사부 TEL: 273-1141(국) 212-215 FAX: 275-0582